사람들의 신념과 바른 정의관*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기독교학문연구회 법학 분과장)

* 필자의 이 글은 필자의 저서인, 조영길,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 I, II, 비봉출판사, 2011 중 제 8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이념 역량 개선, 255-403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요약, 정리, 부분적으로 보완했다. 필자 저작부분은 일일이 해당 되는 내용에 대하여 주석을 달지 않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을 양해 바란다.

(201306) - .indd 16 13. 5. 24. 4:41

1. 서론–바른 정의관의 중요성

"정의(진리, 원칙)란 무엇인가?"는 정의관을 다루는 질문이다. 수 많은 견해들이 나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 지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보편 타당한 가치와 기준"이다[1] . 현재 주류 법학이 정의에 대하여 가진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바로 "보편적 타당성"이다[2].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수용한 이념인 신념은 그의 태도와 행동의 기본 방향과 세부내용까지도 결정하게 한다. 이념 중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 정의관(진리관, 원칙관 등으로도 부른다)이다. 정의관이 잘못되면 대단히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초래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지대한 계급투쟁주의의 상대적 당파적 정의관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바른 정의관을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상대적 당파적 정의관 개요

계급투쟁주의는 정의 등과 같은 모든 관념들은 끊임 없이 변화하는 물질 운동의 반영이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상대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마땅한 변하지 않는 정의, 보편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정의, 진리, 철학, 도덕, 종교 등 규범은 이를 주장하는 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철학의 당파성이라고 한다. 다수와 소수, 가난한 자와 부자, 피지배자와 지배자, 약자와 강자의 이익은 반드시 나뉘어 서로 충돌될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다수의 가난하며 피지배자인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상대적 당파적 정의관이라 한다.

이 정의관의 기초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이 철학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모두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다.

3. 상대적 당파적 정의관의 부당한 부분과 그 극복 방안

주요 몇 가지 기본 명제를 살펴본다.

1) 정의는 인간 의식이 만드는 것일까? 인간 의식 능력으로부터 독립한 실재인가?

유물론은 정의, 진리 등은 인간의 관념의 산물이므로 인간이 만들었고 따라서 인간들이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법과 도덕, 종교 등은 지배자들이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니 지배자가 노동자 등 민중(인민)으로 바뀌면 지금의 법과 도덕, 종교는 폐기시킬 수 있다고 인식한다. 옳은 견해인가?

그렇지 않다. 정의, 진리 등은 인간의 의식이 그 존재를 인식하여 발견할 수 있을 뿐 의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정의, 진리를 지킬 자유와 지키지 않을 자유는 가지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도 그 위반에 따르는 안 좋은 결과를 받지 않을 자유는 가지고 있지 않다. 정의 위반의 자유는 주어졌으나 정의 위반에 따르는 책임, 심판을 면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꼭 합리적이고, 정직해야 하며,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 정의가 있으라는 법이 있느냐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러한 정의가 없다고 합의하자고 한 후, 계속하여 불합리, 거짓, 인간 멸시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 계속되는 불의한 행동에 따르는 안 좋은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 결코 없다.

1. 김경섭 역,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 김영사, 2004, 48-55면.
2.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2008, 20면.

(201306) - .indd 17 13. 5. 24. 4:41

현실의 국가의 법원의 심판 받지 않았다고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다. 정의를 위반함으로써 올 수 밖에 없는 좋지 않은 결과(신뢰의 상실, 관계의 파탄, 퇴보와 쇠락 등)가 발생하고 있는 것 등도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며, 정의로운 삶이 주는 당당함, 정결함, 생명력 등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끄럽고 더러우며 쇠락하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삶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이다. 이처럼 정의의 지배력은 인간의 의식 능력을 넘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정의와 진리는 사람의 제한된 자유와 능력을 넘어 결코 소멸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실재적 존재로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C.S. 루이스도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마땅이 지켜야 할 도덕률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현실에 실재한다고 했다[3]. 예수님도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요 10:35)"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6, 8)"고 직접 말씀하셨다.

많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내세우거나, 마음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거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받아서이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폐하려 한다(마 15:3,6, 막 7:8,9,13, 겔 33:31, 창 3:6).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진리를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점과 오히려 정의로운 진리가, 정의와 진리를 버린 그들을 버리고 심판했음을 수 없이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Marx는 공산당선언에서 "자유, 정의 등 어떠한 사회에도 공통적인 영원한 진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 모든 종교나 도덕을 …아예 폐지한다(abolish)"고 선포함으로써 보편 타당한 정의를 없애려 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독교 등 종교를 철저히 파괴시키려 했다. 그러나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종교를 탄압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붕괴했다. 반면, 그 살벌한 탄압에서도 기독교 등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성장했다. 정의와 진리는 인간이 결코 없앨 수 없음을 인류 역사는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3. 장경철, 이종태 옮김, C.S.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홍성사, 2001, 50면.

(201306) - .indd 18 13. 5. 24. 4:41

2) 정의는 상대적인가? 보편적인가?

진화론 현상을 들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 말고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명제는 상대적 정의관을 대변한다. 과연 그러한가?

정의와 진리의 본질과 핵심은 모든 인간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진다. 다만 그 구체적인 표현 형태, 존재 모습, 적용 행태 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무수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진리의 본질이나 핵심 내용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인간은 공정해야 한다", "인간은 정직해야 한다", "인간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옳은 진리와 정의인 것이다.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 정의와 진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 정의관은 정의와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고, 정의와 진리를 벗어나도록 부추기는 교묘한 거짓이다. 이 상대적 정의관은 다양한 정의의 구현 모습을 일견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럴듯하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인간 능력으로 없앨 수 없는 정의로부터 지배 받는 것을 거부하고, 정의를 만들어(내세워) 정의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 내지 조작하려는 그릇된 관점으로 인도하게 된다. 인간이 정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인간을 지배하도록 해야 인간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다.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가 마땅하다. 인간이 정의를 만들어 지배하도록 하면 불의한 속성의 인간이 정의를 자신의 불의한 욕구를 위해 악용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류 역사는 수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며, 정의를 만들려 하거나 없애려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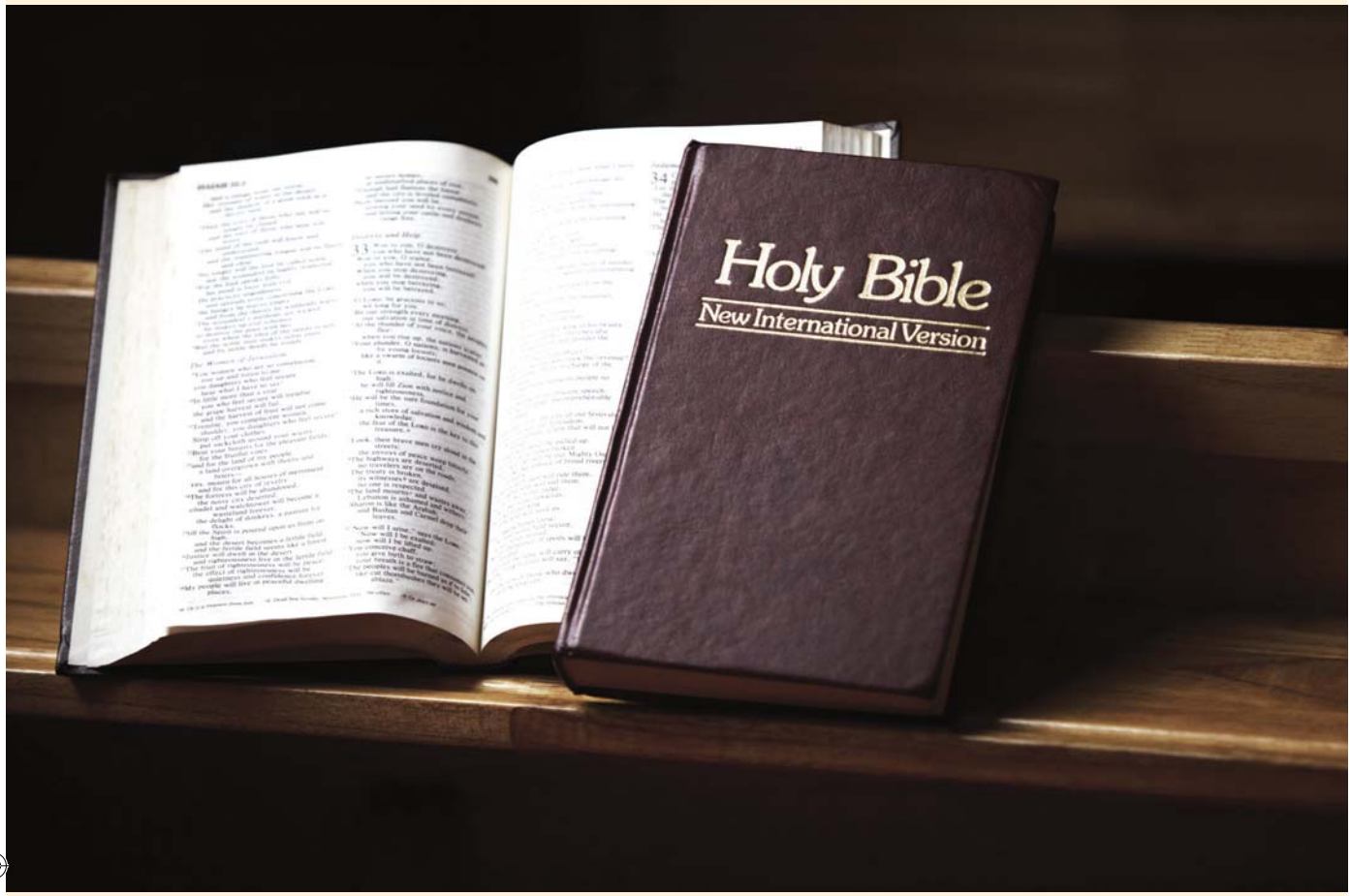
3) 정의의 핵심은 당파적인가? 무당파적 타당성인가?

모든 정의, 진리 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철학의 당파성"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수의 가난한 약자와 피지배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가난한자를 도우라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성경적 정의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타당한 것일까?

일견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진리는 아니다. 정의는 유익이 본질이 아니다. 아무리 유익해도 정당하지 못하고 과도한 이익은 부당한 이익이며 탐욕으로 정의가 아니다. 정당화되는 이익은 오직 정의로운 이익뿐이다. 정당성, 타당성이 바로 정의의 핵심 개념인 것이다. 사람은 경제적 유익도 추구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한다.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수의 가난한 약자와 피지배자의 이익 중 정당한 이익만이 보호되어야 한다. 아무리 다수의 가난하고 약자이며 피지배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은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소수의 부자이며 지배자이고 강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보호해선 안되지만 그의 정당한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소유의 다소, 힘의 유무, 지배 여부, 숫자의 다과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출 23: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출 23:6)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지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정의는 특

(201306) - .indd 19 13. 5. 24. 4:41



정 집단의 편이 아니다. 오직 정의를 지키는 사람의 편이다. 정의의 핵심은 이익인 당파성이 아니라 옳고 바름의 타당성인 것이다.

4) 정의는 강제적 방법을 우선으로 실현해야 하는가? 자유로운 방법을 우선으로 실현해야 하는가?

변증법은 자유로운 호소로는 문제가 불의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약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즉 강제력으로 부당한 억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가?

인간 정신의 자유를 간과한 잘못된 견해다. 인간은 자유로운 지성, 감성, 의지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리, 정의, 원칙을 가지고 호소하면 자신의 입장, 환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거짓, 불의, 원칙위반을 버리고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 환경을 다스릴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창 1:28).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변화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정의, 진리,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인내하며 자유로운 방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강제력을 최우선시하거나 너무 빨리 사용하면 관계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온다. 가족관계, 직장 관계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계급투쟁주의 혁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제 수용소에 가두도록 한 것이 정의를 강제(폭력)로 실현하라는 사상이다. 실제 계급투쟁주의 혁명 과정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 소련만 2,000만명에 이르고, 중국도 1,000만명에 이르며, 동남아 공산화 과정에서 수십, 수백만이 살해되었다. 6.25. 전쟁과 북한 공산화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희생되었다.

(201306) - .indd 20 13. 5. 24. 4:41

강제력도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필수적이나 최우선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로운 상태의 호소가 효과가 없고, 상대방의 불의로 인하여 관계 상대방들이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경우 국가나 사인의 합법적인 강제력으로 그 자유와 권리 침해를 배제해줄 수 있다. 정의를 위한 강제력 행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법률이다. 법률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격언은 정의 위반에 곧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유로운 상태의 준수를 권고하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법률이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가난한 약자에 대한 긍휼과 구제는 가진 자만의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아 나누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라도, 심지어 가난한 자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강제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모든 땅과 생산수단을 강제로 빼앗아 국유화하는 공산주의 혁명은 결국 자유의 역동성을 파괴하여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고, 정치적으로도 자유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그 종주국들로부터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정의를 부득이 강제하려 할 때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바른 정의관 – 상대적 당파성에서 보편적 타당성으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사 48:17, 18)"라고 말하고 있다.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은 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불의의 길로 이끄는 대단히 위험하고 악한 정의관이다. 이 정의관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편 타당한 정의와 진리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 기업가, 종교인 등도 그 삶에서 상대적 당파성의 정의관을 믿고 이를 따르기는 마찬가지이다. 후자가 더 위선적인 악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진리와 정의 앞에 정직하게 자신들의 사고와 태도와 행동을 비추어보고, 멀어진 부분들, 어긋난 부분들을 끊임 없이 반성하고 회개하여 돌아서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유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실재하는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원한 정의와 진리를 향해 계속하여 나아가는 것이 모든 관계를 개선하여 이를 영원한 생명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조영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 노사관계개선연구소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다. 노사관계 개선 자문, 우호적,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M&A), 인사 및 노동법, 기업법률 일반 등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자문위원, 노동부 노동정책자문위원, 노동부 자문변호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노동법 쟁점 해설〉(공저, 1998),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1,2〉(2011)이 있다.

(201306) - .indd 21 13. 5. 24. 4:41